

외 교 부

(110-787) 서울시 중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통상부 704호, Tel:2100-8008, Fax :2100-7961

2014년 7월 29일

아래 문건을 수신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

수 신 : 참여연대 (Fax 02 6919 2004) 이미현 간사님

발 신 : 외교부 중동1과

표지포함 : 총 4 매

MEMO

이미현 간사님

참여연대에서 송부하신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외교부 중동1과(02 2100 7481)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7.29

외교부 중동1과

박경식 드림

인쇄 : 박경식 / 중동1과 (2014-07-29 16:41:33)

대한민국! 2014년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 3회 연속 -



외 교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참여연대 질의서에 대한 답변 송부

수신 : 참여연대

사본 : 유엔과장, 인권사회과장, 국제법규과장

발신 : 외교부장관(중동1과장)

1. 귀 단체에서 2014. 7. 16 우리부로 송부한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 관련입니다.

2. 상기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별첨 송부합니다. 끝.

붙임 :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

외 교 부 장 관

수신자 참여연대, 인권사회과장, 유엔과장, 국제법규과장

외무서기관 박경식 심의관 대견 2014. 7. 29.
여운기

협조자

시행 중동1과-3691

접수

우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1303

/ <http://www.mofa.go.kr>

전화번호 02-2100-7481

팩스번호 02-2100-7961

/ kspark08@mofa.go.kr

/ 대국민 공개

오늘은 정보공개 업데이트의 날입니다.



외 교 부

참여연대 결의에 대한 답변서

우리 정부는 가자지구 사태가 더욱 격화되고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민간인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군사공격 및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지구 무장단체의 로켓 공격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이집트 등 역내 국가와 유엔의 중재노력에 호응하여 즉각적인 휴전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7월 8일 가자사태 발발이후 지금까지 발표한 3건의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및 보도자료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7월 23일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기에서 나비 필레이(Navy Pillay) 인권 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하마스와 기타 무장단체들에 의한 무차별한 로켓 공격을 비난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상의 민간인·민간시설과 전투원·군사시설간 구분,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해변가에서 놀고 있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하는 등 이스라엘의 공격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국제인도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유엔 기구들에 따르면 병원, 종교시설 등도 이스라엘의 공격대상이 되는가 하면, 국제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자 지역 내 학교에서 로켓이 발견되는 등 분쟁 당사자 양측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23일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기에서 채택된 결의는 이번 상황을 조사할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이 조사위원회는 내년 3월 제28차 인권이사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특별회기에 참석한 국가들은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휴전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으나, 결의 내용의 공정성 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함으로써 결의는 표결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랍그룹이 제의한 이번 결의가 하마스의 로켓 공격은 거론하지 않는 등 공정성

문제에 따라 기권하였으나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준수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우리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통 받고 있는 가자지구내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100만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관련, 우리는 2개국 해법(Two-state solution)에 입각한 이-팔 평화협상을 지지해 왔으며,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 건설 및 정착촌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고,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및 안보리에서의 관련 논의나 결의 채택시에도 이러한 입장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결권 결의에 대해서도 찬성해 오고 있으며, 점령지역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정례인권검토(UPR) 계기에 차별 없는 인권보장 노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인적자원 및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까지 약 4,200만불을 지원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400만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하마스는 2014년 6월 파타(Fatah)와 함께 팔레스타인 통합정부에 참여하였으며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통합정부가 이스라엘 인정, 폭력 포기, 기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련 합의 인정(Quartet Principles) 원칙들을 준수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 통합정부의 출범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통합정부가 압바스 수반이 약속한 원칙들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가자지구 사태를 통해 보듯이 하마스와 가자지구내 여타 무장단체들이 폭력을 사용함에 따라 앞으로 통합정부의 미래가 불투명하며, 이-팔 평화협상의 재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등 다자무대와 양자차원에서 이-팔간 항구적 평화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보여주신 높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4. 7. 25.

외교부